

도의회 문건위, 건설교통국 행감

이정린 의원, 지방하천 수목현상 방지 위한 정비 요구 김대오 의원, 방만하게 추진되는 확포장 공사 지적 이병도 의원, 건축문화 지원 위해 각별한 관심 당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5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타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린 의원(남원)은 지방하천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 제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462개소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예산 32억 외 추가 확보를 통하여 유수의 흐름 방해로 하천범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생수목 제거사업 가속화로, 하천유지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오 의원(익산)은 금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관련, 금년 전라북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19개의 평균 공사기간이 약 15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도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 15년가량 지속되는 더딘 공사로 인해 신설도로는 무늬만 신설일뿐 장

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장기간 지속되는 공사는 행정의 지도·점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전북이 서울, 경기 수도권 제외 한 전국 포트홀 1위라는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김 의원은 방만한 양의 도로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한도로씩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포장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농어촌특별회계 예산 집행 관련, 전라북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 한옥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농어

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편중되어 있어, 한옥 등 건축문화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옥 지원 등 건축문화 관련 분야에 대한 도의 적극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하여서는, 내년 7월 지정 해제되는 도시공원 이 도 전체 도시공원 지정면적의 52%나 차지하는데 비해, 도에서 너무 인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은 각 시군 소관사항으로 시군별 대응방안이 상이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 전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사 운영 관련, 최근 도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입주 전 부실시공 예방으로 입주예정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위 검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행정차원에서 관리비 비리 및 공사용역 점검과 공동주택 계약원가 심사 자문단 운영, 외부 회계감사 제도 등의 적극 활용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중단됐다 재개된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해 현화하고 있다.

전북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밝혀져

최영일 도의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안일한 대처 지적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은 제368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5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승격 대상 15개소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주요원인이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있었다고 질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2차 례에 걸쳐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승격작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서 신청대상을 제출했고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5월 1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전라북도 지방하천 총 462개소, 2,917km 중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단 121개소에 불과하다. 개수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28%다. 정비사업을 못할 경우 홍수 및 침수피해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지역체제를 가속화시킨다. 그러나 도는 정비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가하천 승격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전라북도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만 하는 등 승격 신청 과정에서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15개소 중 우리 도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각각 4개소씩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내막을 들여다 보니 충청북도는 도에서 선정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직접

선정하여 국토부에 신청했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가 검토하여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14개소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고, 이외에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군에서 시급하다고 요청한 지방하천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승격신청에 대해 도 자체적인 검토만 한 정도였고, 그저 시군 수요조사만 거쳐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다. 도의 안일한 대처가 도를 넘어 결국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가하천 승격은 절호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막대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며 질타했다.

국토부가 나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2008년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마련한 이후 최초의 일이며, 국토부는 내년에 도 국가하천 승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교육위, 환경교육과 안전한 시설 관리 당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5일 2019년도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생들에게 맞는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최영규(부안) 의원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육성 지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교육과 독서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관리 외에 의무도 있기 때문에 환경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강조하고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돌봄교실 위탁과 관련해 "위탁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한다"면서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게 돌봄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놀이시설 안전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도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아동들에게는 정서상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필요하다. 놀이시설이 없는 유치원 등을 전수조사해 개선해야 하는 등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행석(비례대표) 의원은 "도내에는 라돈수치가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다"면서 "매뉴얼대로 라돈을 저감해야 하

며, 관련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지도와 동시에 저감장치 설치로 철저한 대비와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일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이 지역별로 상이해 파국을 부를 수 있다"면서 "지난해 대비 1만명의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방과후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학생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에 대한 지역별 긴밀한 협의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정읍 김종희 · 고창 임정호 · 차남준 의원 민주당 복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지난 9월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정읍시의회 김종희(신대인·북면·정우·갑곡) 의원과 고창군의회 임정호(고수·성송·대산·공음면)·차남준(아산·무장·해리·상하면) 두 의원에 대한 복당을 허가했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

장 윤준병)는 지난 15일 "3명 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복당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 임·차 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그동안 무소속으로 있었으며, 김종희 정읍시의원은 지난 9월 민주당 복당을 탈당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하고 복당을 환영한다"면서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전 당원과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의회 김종희 의원은 "심기일전해 정읍 발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상진 대안신당 대변인 "익산 장점마을 사태, 광범위한 조사 나서야"

고상진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환경부 발표에 따른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연초박 내 TSNAs 등 발암물질과 이 주민들의 암 발생의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고봉을 호소한 주민들



을 정부나 자치단체가 방관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의무를 해태하면서 생명을 잃게 된 어처구니없는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 발암물질이 수년간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관한 책임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고 즉각적인 주민보상과 더불어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천명했다.

또한 무서운 발암물질인 TSNAs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고 우리 생활환경 어느 곳에 노출되고 있는지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장점마을 사태가 한낱 해프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상진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 내서 돌아가신 분들, 지금도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의미를 기려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익산=장영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